

작성: 김태원 객원연구원(kim.tae.won@ydi.or.kr)

## 1. 추진 경과

- 지난 5월 20일, 美 연방하원에서 「한반도 평화법안」(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, H.R.3446) 발의
- 대표 친한파로 알려진 브래드 셔먼(Brad Scherman, 캘리포니아) 의원 대표발의
- 최근 브래드 셔먼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(12.4)
  - 로 칸나(Ro Khanna), 앤디 김(Andy Kim), 그레이스 멩(Grace Meng) 의원 공동발의, 12월 13일 현재, 하원의원 34명이 지지한 가운데, 공화당 앤디 빅스(Andy Biggs)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당 내에서도 급진적 진보 세력으로 알려짐
  - 同 법안에는 앤디 빅스(Andy Biggs, 애리조나), 추이 가르시아(Chuy Garcia, 일리노이), 드와이트 에반스(Dwight Evans, 펜실베이니아), 바바라 리(Barbara Lee, 캘리포니아), 앨런 로엔솔(Alan Lowenthal, 캘리포니아), 짐 맥거번(Jim McGovern, 매사추세츠) 의원 등 서명
  -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 메이트 물망에 올랐던 실용진보노선 카렌 바스(Karen Bass, 캘리포니아), 지난 대선에서 하원의원 중 가장 먼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토머스 스워지(Thomas Suozzi, 뉴욕), 아시아태평양양코커스(CAPAC) 의장 주디 추(Judy Chu, 캘리포니아) 의원 등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유력 정치인으로 꼽힘
- 한편, 영 김(Young Kim, 캘리포니아) 등 공화당 하원의원 35명, 종전선언 반대 공동서한 작성(12.7)
  - 영 김 의원이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이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발송
  - 해당 서한은 마이클 맥콜(Michael McCaul)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33명의 다른 동료의원들의 이름으로 제이크 설리번(Jake Sullivan) 국가안보보좌관, 앤서니 블링컨(Antony Blinken) 국무장관, 성 김(Sung Kim) 대북특사에게 전달

- 한편, 나경원 前 의원은 지난 10월 초 방미해 마이클 맥콜, 영 김 등 미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와 회동하며 종전선언 반대 설득
-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“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과 별개 사안”이라며 반박(12.9)
- 외교부 안팎에서는 특정 국가의 정치권 움직임이나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은 외교관계상 적절치 않다던 기존 입장과 달라 이례적이라는 평가

## 2. 주요 내용

### □ 한반도 평화법안 주요내용

- 한반도 평화법안은 △한반도 종전선언, △평화협정 체결, △워싱턴과 평양에 북미연락사무소 설치, △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 지원, △비핵화와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
- 同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음
  - 제1항: 同 법안의 명칭을 「한반도 평화법안」으로 규정
  - 제2항: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 정신에 입각해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공동성명 합의 정신에 입각해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종전선언에 노력할 것 권고
  - 제3항: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항 재조정 권고
  - 제4항: 한국과 미국, 북한 3자 간 現 정전체제를 종식, 비핵화와 연계 없는 평화협정을 추진하도록 요구, 종전선언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평화협정에 포함
  - 제5항: 북미 「싱가포르 공동성명」 합의에 입각하여 북한과 양측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
-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긴장이 아니라, 강한 외교와 평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하원의 촉구가 담겨있는 법안으로 평가됨
  - 2018년 4·27 「판문점 선언」을 지지하는 한편, 美 국무장관이 남북한과 함께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‘외교적 관여(diplomatic engagement)’ 추진을 요구
  -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 대한 ‘로드맵’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

## □ 관련 지지서명 운동

- 미주민주참여포럼(KAPAC)은 해당 법안발의와 입법화에 주도적 역할 담당
  - 미국에서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평화단체
  - 송영길 대표, 박영선 前 중소기업벤처부 장관, 김경협, 윤건영 의원,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,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등 단체 주요 활동 관련해 여권 관계자 다수 참여
-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도 同 법안의 통과를 위해 민간 평화 공공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
  - 민주평통 사무처-미주부의장 및 미주지역 협의회장, 한반도 평화법안지지 서명운동 관련 협조요청(단, 기관 명칭, 자문위원·간부위원 명의가 아닌 개인자격 권고)
-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연대 한국사무국은 11월 1일 온라인 지지서명 캠페인을 통해 시민 참여 호소(12월 13일 기준, 6,060명 지지서명 참여 중임)

## □ 참고사항

- 한반도 평화법안 관련 與 주요 인사 활동
  - 이석현(민주평통 수석부의장):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회동(11.28)
  - 박영선(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): 앤디 김 하원의원 회동(10.26)
  - 송영길(더불어민주당 대표): 한반도 평화법안 서명 美 하원의원 방한(11.24), 앤디 김 하원의원 회동(9.24)
  - 김경협(더불어민주당 의원): 국회 평화외교포럼 방미(6.20)
  - 김경협 의원 外 186명 국회의원: 美 연방의회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환영(5.21)
- 한반도 평화법안 비판 여론
  - 비영리단체 ‘원코리아네트워크(OKN)’는 타임스퀘어 옥외광고판에 북한 주민을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 올바른 대북정책을 추진하라는 비판 광고를 송출,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(KCPAC)와 함께 同 법안 반대 캠페인 실시(9.21)
  - 同 법안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정권만 이롭게 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,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을 종식시킨다며 ‘거짓 평화’의 위험성 경고
  - 同 법안의 철폐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

### 3. 시사점

#### ① 주요 검토사항

##### 한반도 평화법안(H.R.3446) 제4항

- 한국과 미국, 북한 3자 간 現 정전체제를 종식
- 비핵화와 연계 없는 평화협정을 추진하도록 요구
- 종전선언을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평화협정에 포함

#### ○ 문제점 ①: 비핵화와 연계 없는 평화협정 추진

- 평화협정이 성사되려면 북한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美 정부의 입장인데, 북한 비핵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
-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
- 이는 중국에 미국, 한국 및 동맹국의 협상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
-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조치가 필요함을 분명히 명시해야 함

#### ○ 문제점 ②: 종전선언을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평화협정에 포함

- 한반도 평화협정 속에 한국전 종전선언을 포함,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
-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종전선언 제안과 4.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평화협정 당사자 ‘3자 혹은 4자’와 배치됨
-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‘先 한반도 종전선언, 後 평화협정 체결’임

#### ○ 또한, 법안 내용들이 자칫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, 김정은 정권이 주장해 온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

- 1975년 베트남,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 사례를 유념해야 함

#### ② 전망 및 시사점

#### ○ 발의 7개월째 첫 관문인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

- 美 의회 내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며, 법안 통과 시까지 필요한 긴 절차를 감안할 때, 법안 통과는 공화당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어려울 전망
  - 다만, 해당 법안을 발의한 美 하원의원들의 향후 법제화 전략과 이를 지지하는 여권 주요 인사들의 행보를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
    - 해당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, 美 의회에 한국 내 우려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
    - 특히,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한반도 평화 관련 통일외교 전략으로 활용 가능
- ※ 예: ‘후보(더불어민주당/민주研)-KAPAC-美 하원’ 간의 회동, 면담 등 추진